



국민기본소득제 제안

2021년부터 실현가능한 자원 마련 방안

발표: 이원재 LAB2050 대표
연구: 이원재 윤형중 이상민 이승주

목차

1. 국민기본소득제의 취지와 개요

2. 재원 마련의 원칙과 내용

3. 누가 손해/이익을 보는가

4. 효과와 전망

1. 국민기본소득제의 취지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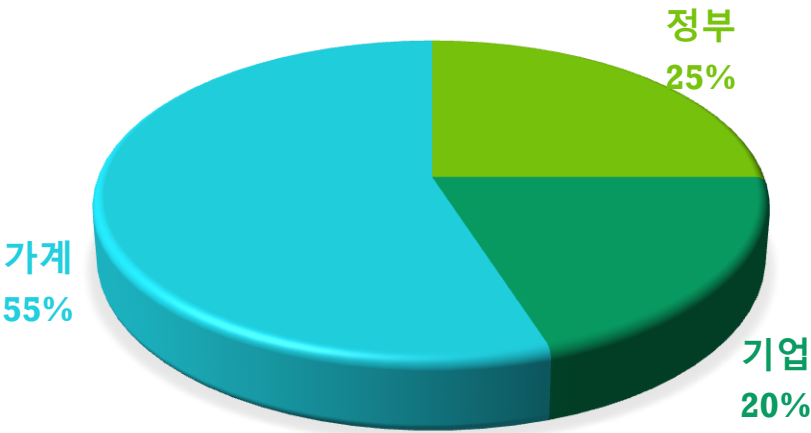


국민소득(부가가치) 기반의 선분배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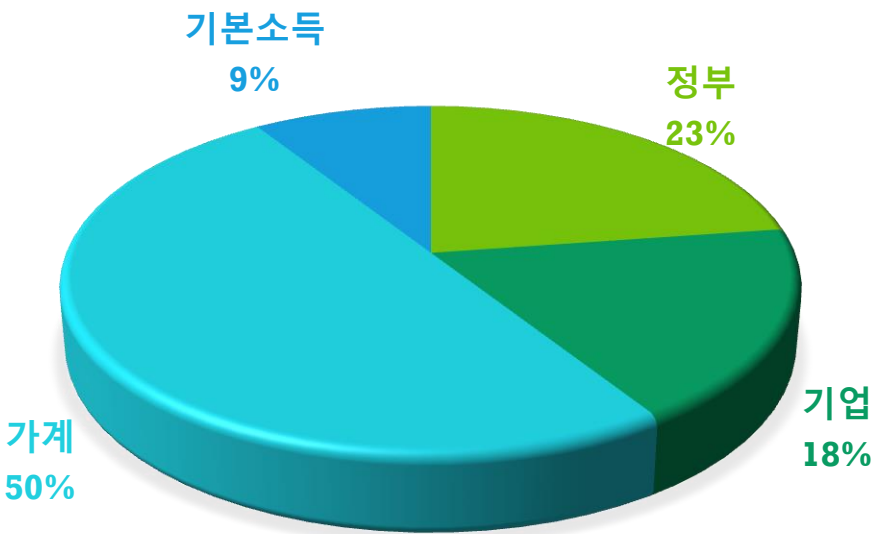


기본소득 형태의 선분배는 가계소득을 늘리고 중간층 이하 소득을 높여 현재 소득분배의 문제를 사회적 갈등과 추가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며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소득분배



기본소득 도입시 소득분배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안들과 그 효과



소득불평등을 직접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수당을 검토한 결과,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한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 것으로 판단했다.

	재분배 효과	행정효율성	민간소비 촉진	자유노동 촉진
선별수당	높음	낮음	보통	낮음
사회수당	보통	높음	보통	보통
음의소득세	높음	보통	높음	높음
보편적 기본소득	보통	높음	높음	높음

다양한 소득재분배 제도의 효과 추정

국민기본소득제의 차별점



국민기본소득제는 기존 보편적 기본소득제와 다음 사항에서 차별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1) 사회적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 (2) 정비해야 하는 법제도를 줄이며 (3) 다양한 성향의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는다

- 생태세, 국토보유세 등 세목을 신설하지 않음

❑ 세율을 높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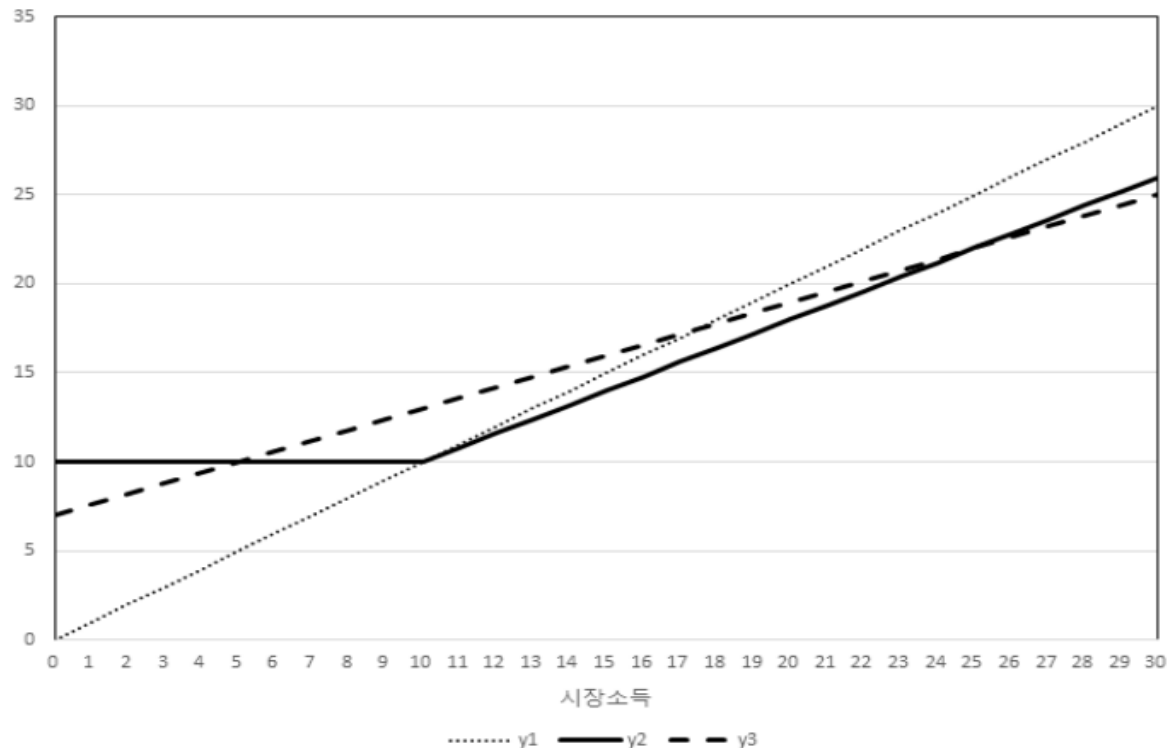
- 핵심재원인 소득세 명목세율을 높이지 않음

❑ 고소득자가 더 부담하고 중/저소득자가 더 받는다

- 같은 액수를 지급하지만 공정한 과세를 통해 고소득자 부담을 더 늘림으로써 보편적 기본소득제이면서도 고소득자가 더 부담하는 구조를 갖추

행정적으로 보편적, 경제적으로 누진적인 기본소득제

소득세 누진성을 강화한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행정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지급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고소득자가 더 부담하는 음의 소득세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



y1: 아무런 소득재분배가 없을 때의 가처분소득

y2: 기초생활보장 하의 가처분소득

y3: 기본소득/부의 소득세 하의 가처분 소득

기초생계급여와 기본소득/부의 소득세 효과
(자료: 유종성.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2018, pp.3~35. 기본소득의
재정적 실현가능성과 재분배효과에 대한 고찰)

국민기본소득제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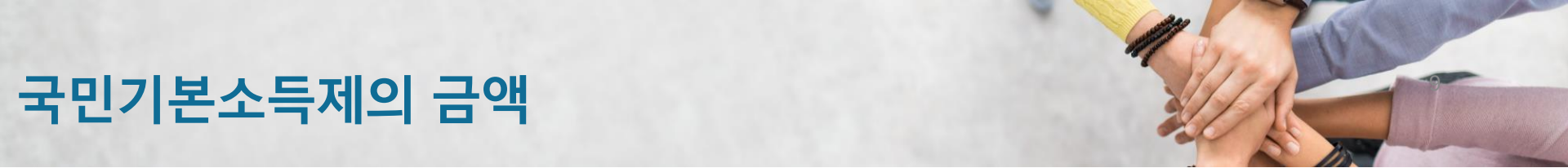
□ 3개년도 6개 시나리오를 제시

	2021년		2023년		2028년	
인구	5182만명		5187만명		5194만명	
월지급액	30만원	40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	65만원
필요재원	187조원	249조원	218조원	280조원	312조원	405조원

□ 왜 2021년, 2023년, 2028년인가?

- 국민기본소득제는 전국 단위 선거의 핵심 의제로 제시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기본소득제의 금액

□ 왜 월 30만원 ~ 월 65만원인가?

- '21세기 기본소득'의 저자 판 파레이스는 GDP의 25% 수준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해 개인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
-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기본소득의 지급액 규모는 그 자체가 중요한 주제로 '개인에게 실질적인 자유를 주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탈상품화가 가능한 수준인가', '기본소득만으로 생계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가 기존의 질문이었음.
- 기존 수당제도의 대체가능성을 고려
 - 궁극적으로 국민기본소득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제도를 대체.
 - 2028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08만원으로 추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액이 62만5075원임. → 2028년 월65만원안
 -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대체 고려 → 2021년 월30만원안

□ 국민기본소득제는 모두에게 똑같은 출발선인 '사전분배'정책

- 시장이 담당하는 1차 분배, 정부가 역할을 하는 2차 분배 이전에 국민총소득(GNI)의 10% 정도를 사전분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 2021년 월30만원안은 GNI의 8.5%, 2023년 월35만원안은 GNI의 9.1% 수준임.

2. 자원 마련의 원칙과 내용



재원 마련의 6가지 원칙 (1)



1원칙 Ⅱ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손해를 입지 않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를 보호하는 법률.
- 국민기초소득제는 생계급여의 일부, 기초연금, 아동수당을 대체하고, 생계급여와 중복수급이 가능한 교육·의료·주거급여와 장애인연금을 대체하지 않았음.

2원칙 Ⅱ 기존의 소득에서 재원을 찾는다

- 국민기초소득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총소득의 일부를 사전분배하는 성격.
-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미래의 제도가 아닌, 지금의 문제를 풀고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현재의 제도'
-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명목세율을 올리지 않는다는 원칙이기도 함.
- 로봇세, 데이터세, 환경세 등을 포함하지 않았으나, 논의의 마중물 역할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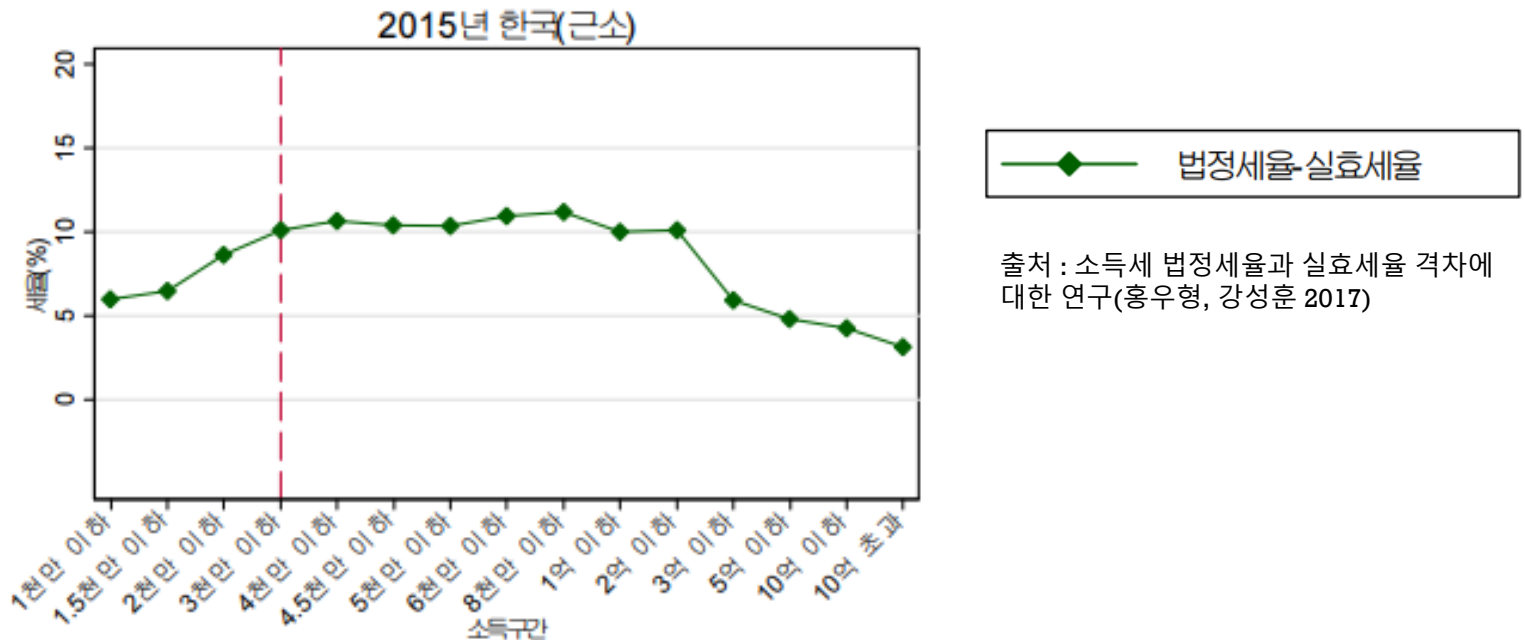
재원 마련의 6가지 원칙 (2)

3원칙 Ⅱ 세금 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한다

➤ 기본소득을 정의하는 5가지 특징

정기성(periodicity) 현금성(payment in cash) 개별성(individuality) 보편성(universality) 무조건성(unconditionality)

- 국민기본소득제는 '지급' 뿐 아니라, '세금 제도'를 포함한 재분배 시스템.
- 모두에게 똑같이 주는 대신에 세금은 누진적으로 거둔다
- '누진성' 강화하는 방법 : 소득세제의 공제제도 폐지와 기본소득 과세소득화



재원 마련의 6가지 원칙 (3)



4원칙 Ⅱ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게 한다

-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와 달리,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가 실현되지 않고 있음.
- 과도한 공제, 감면 제도로 인해 2017년 기준 근로소득자의 41%가 면세자임.
- 소득세제 개편과 기본소득 과세화로 국민개세주의 실현.
- 모두가 납세자인 사회에선 세금 제도 전반이 새로운 환경에서 재검토될 것임.

5원칙 Ⅱ 4대 사회보험과 관련된 재정, 기금 등을 활용하지 않는다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서 근로능력 상실시, 육아휴직시, 은퇴시 소득보장 등의 역할은 국민기본소득제와 겹침.
- 국민기본소득제의 금액 수준을 감안하면 사회보험 완전 대체는 어려움.
- 보수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본소득안을 위해 사회보험 재정을 미활용.
- 다만, 향후 고용보험료 신규 납입분,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하는 균등부분에 대한 논의 마중물 기대.

재원 마련의 6가지 원칙 (4)



6원칙 Ⅱ 연소득 47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이 이익을 얻는다.

- "국민기본소득제는 새로운 정치의 시작 "
⇒ 제도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해지는지가 분명해짐.
- 새로 받는 기본소득 vs 더 내는 세금
⇒ 소득계층별로 어느 쪽이 많고 적은지가 명확함.
- 연소득 4700만원은 2021년 추정 상위 27% 소득계층이고,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약 600만명임. 즉, 국민기본소득제가 손해인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12% 정도임.
- 손익 기준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짐. 가구 소득이 9400만원(2인 가구), 1억 4100만원(3인 가구), 1억8800만원(4인 가구) 이하이면 국민기본소득제가 이익임.

재원 요약(1)



① 2021년 월30만 원 안

재원마련 방안		금액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	소득세제 비과세·감면 정비(명목세율 3%p인하)	56.2조 원
	기본소득 과세	15.1조 원
공정한 세금 제도	탈루 및 비과세 소득 적극 과세	11.6조 원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소득보장 제도	일부 복지정책 폐지 및 축소	31.9조 원
	소득보전 성격의 비과세·감면 정비	18.3조 원
재정 구조조정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8조 원
	지방재정 지출 조정	6조 원
	융자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	15조 원
유휴 및 신규 재원 활용	재정 증가분의 일부를 활용	9조 원
	지방정부 세계잉여금을 활용	16조 원
합 계		187.1조 원
국민기본소득제 필요 재원		187조 원

재원 요약(2)



⑥ 2028년 월 65만 원안

재원마련 방안		금액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	소득세제 비과세·감면 정비(명목세율 유지)	117.6조 원
	기본소득 과세	42.1조 원
공정한 세금 제도	탈루 및 비과세 소득 적극 과세	15.4조 원
기본소득으로 대체되는 소득보장 제도	일부 복지 정책 폐지 및 축소	49.8조 원
	소득 보전 성격의 비과세·감면 정비	25.1조 원
재정 구조조정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5조 원
	지방재정 지출 조정	5조 원
	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	0원
유휴 및 신규 재원 활용	재정 증가분의 일부를 활용	145조 원
	지방정부 세계잉여금을 활용	0원
합 계		405조 원
국민기본소득제 필요 재원		405.1조 원

재원 마련 방법 (1)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1)

소득세제에 존재하는 모든 비과세·감면 제도를 폐지시키고,
'세전소득=과세표준'이 된다면?

연도	모델	근로소득·종합소득 의 비과세·감면 정비	순수일용근로소득 의 비과세·감면 정비	기본소득 과 세	합계
2021년	월 30만 원안	53.3조 원(세율 3%p씩 인하)	2.9조 원	15.1조 원	71.3조 원
	월 40만 원안	62.2조 원(세율 2%p씩 인하)	2.9조 원	21.7조 원	86.8조 원
2023년	월 35만 원안	65.0조 원(세율 2%p씩 인하)	2.9조 원	20.9조 원	88.8조 원
	월 45만 원안	84.0조 원	2.9조 원	29.8조 원	116.7조 원
2028년	월 50만 원안	114.7조 원	2.9조 원	32.4조 원	150.0조 원
	월 65만 원안	114.7조 원	2.9조 원	42.1조 원	159.7조 원

재원 마련 방법 (1)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2)

3%p 인하 : 2021년 월30만원안

2%p 인하 : 2021년 월40만원안, 2023년 월35만원안

명목세율 현행 체제 유지 : 2023년 월45만원안, 2028년 월50만원안, 월65만원안

표/소득구간(과세표준)별 소득세 명목세율

과세표준	명목세율	2%p 인하	3%p 인하
1,200만 원 이하	6%	4%	3%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3%	12%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22%	21%
8,800만 원 초과 1억5,000만 원 이하	35%	33%	32%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6%	35%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38%	36%
5억 원 초과	42%	40%	39%

재원 마련 방법 (1) 단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제(3)

손해와 이익이 갈리는 지점은?

표/2021년 기본소득 도입시 1인당 세금증가액

단위 : 백만원

소득계층 (%)	통합소득	과세표준	3%p인하시 세금증가액	기본소득 과세액	2% 인하시 세금증가액	기본소득 과세 액
21	56.51	56.51	3.98	0.76	4.54	1.06
22	54.76	54.76	3.79	0.76	4.34	1.06
23	53.09	53.09	3.61	0.76	4.15	1.06
24	51.49	51.49	3.42	0.76	3.94	1.06
25	49.97	49.97	3.23	0.76	3.73	1.06
26	48.51	48.51	3.03	0.76	3.52	1.06
27	47.15	47.15	2.87	0.76	3.34	1.06

재원마련방법 (2) 공정한 세금제도

□ 공정한 세금제도 확립은 국민기본소득제를 지탱하는 근간

- 역외탈루 방지, 임대소득 탈루 방지,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종교인 과세, 공무원 복지 포인트 과세,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의 국세청 열람을 통한 숨은 세원 찾기 등
- 숨은세원 :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를 국세청이 일부 부적절한 자료만을 제외한 전체 자료를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세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비과세로 유지 중인 공무원 복지 포인트 과세

공정한 세금제도 운영으로 확보 가능한 재원

연도	모델	역외탈루 방지	임대소득 탈루방지	간이과세제도 폐지	숨은세원 찾기	합계
2021년	월 30만 원 안	2.1조 원	2.1조 원	4.2조 원	3.2조 원	11.6조 원
	월 40만 원안					
2023년	월 35만 원안	2.4조 원	2.4조 원	4.2조 원	3.6조 원	12.0조 원
	월 45만 원안					
2028년	월 50만 원안	3.2조 원	3.2조 원	4.2조 원	4.8조 원	15.4조 원
	월 65만 원안					

재원마련방법 (3) 복지대체 ① 소득보전제도 대체

□ 소득을 보전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복지정책들 중의 일부를 대체

- 특정 연령대의 부분 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진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일부 혹은 전부, 일자리 유지를 위한 사업주 지원정책인 일자리안정자금, 구직 지원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2020년에 최초로 도입되는 실업부조 정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두루누리지원사업 등

확보되는 재원

연도	모델	기초 연금	아동 수당	생계 급여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내 일채움 공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 지원제도	합계
2021	월 30만 원안	18.8	3.1	3.3		1.1	1.6	1.2	31.9
	월 40만 원안			4.5					33.1
2023	월 35만 원안	21.6	3.0	4.3	2.8	1.1	1.8	1.3	35.9
	월 45만 원안			5.5					37.1
2028	월 50만 원안	31	2.9	6.9		1.2	2.7	1.9	49.4
	월 65만 원안			7.3					49.8

자원마련방법 (3) 복지대체

② 소득보전 성격의 비과세 감면 정비

- 소득을 보전하고, 안전망을 강화하는 비과세 감면 정비
 -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대체해 재원을 마련, 부가가치세법, 유가보조금, 기타 농어업용 면세유 세금 감면, 군부대 내에서의 개별소비세와 주류세 감면분 등

확보되는 자원

연도	모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 정비	유가보조금 정비	기타비과세 정비	일몰도래세제	교통에너지환경세	합계
2021	월30만 원안	5.5조 원	0.9조 원	3.2조 원	3.9조 원	2.3조 원	1.1조 원	1.5조 원	18.3조 원
	월40만 원안								
2023	월35만 원안	6.2조 원	0.9조 원	3.6조 원	4.3조 원	2.4조 원	1.2조 원	1.5조 원	20.0조 원
	월45만 원안								
2028	월50만 원안	8.3조 원	0.9조 원	4.8조 원	5.4조 원	2.6조 원	1.6조 원	1.5조 원	25.1조 원

재원마련방법 (4) 재정 구조조정(1)

□ 재정구조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 기존 지출되고 있는 재정 중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지방재정 지출 조정, 용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등을 통한 재원확보

확보되는 재원

연도	모델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지방재정 지출 조정	용자사업 이차보전 전환	합계
2021년	월 30만 원안	8조 원	6조 원	15조 원	29조 원
	월 40만 원안	12조 원			33조 원
2023년	월 35만 원안	8조 원	6조 원	5조 원	19조 원
	월 45만 원안	12조 원			23조 원
2028년	월 50만 원안	5조 원	5조 원	0원	10조 원
	월 65만 원안				0원

재원마련방법 (4) 재정 구조조정(2)

① 기금 및 특별회계 정비

□ 정부는 총 87개의 지갑을 목적에 맞게 운영,

- 일반적인 지출과 수입을 위한 1개의 '일반회계'라는 지갑을 가지고 있고, 19개의 특별회계, 67개의 기금을 두고 있다.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발생하는 여유 재원은 자체적으로 금융 기관에 예치하기도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출하지 않을 여유 자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 관리
- 규모가 2017년 결산 기준 16.3조 원이고, 2018년 결산 기준 25.3조 원.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의 부족 재원을 보충해주고, 적자 국채의 발행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87개로 나뉘어진 지갑이 재정의 칸막이로 작동해 자금 집행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여유분을 과도하게 쌓아두게 하는 측면도 있음
- 특히 특별회계와 기금 사업이 진행되면 해당 사업의 이해관계 집단이 형성됨에 따라 본래 취지대로 재정이 쓰이기보다는 이해 집단을 위해 사업이 지속되는 현상도 나타남

□ 이 중 일부를 국민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

- 복권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의 일부와 공자기금에 예탁한 일부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확보한다고 가정
- 다만 기금 중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국민연금기금 등에서는 재원을 마련하지 않음

재원마련방법 (4) 재정 구조조정(3)

② 지방 재정 지출 조정

❑ 지방 재정의 지출을 조정해 5조~6조 원의 재원을 확보

- 기금 잔액이 31조원, 관련법을 개정해 기금의 운용배수를 설정하고, 남은 재원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음
- 현금성 수당정책의 총규모 89.4조(2017년 기준)

③ 융자 사업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

❑ 재원을 확보 활용 가능

- 이차보전 사업은 자금은 시장에서 조달하고 정부는 시장금리와 정책금리 차액만큼의 이자만 융자 대상에게 지원해주는 방식
- 정부가 전체 융자 금액을 조성하는 사업을 이차보전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시장 자금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수 있다

2021년 국민기본소득제를 처음 시행할 경우(총 30조원)

	2021년	2022년	2023년
융자사업 이차보전 전환으로 확보되는 예산	15조 원	10조 원	5조 원

재원마련방법 (5) 유휴 및 신규재원활용

확보되는 재원 종합

연도	모델	재정증가분의 일부	지방정부 세계잉여금 활용	합계
2021년	월30만 원안	9조 원	16조 원	25조 원
	월40만 원안	51조 원		67조 원
2023년	월35만 원안	37조 원	6조 원	43조 원
	월45만 원안	66조 원		72조 원
2028년	월50만 원안	62조 원	0원	62조 원
	월65만 원안	145조 원		145조 원

마. 재원마련방법 (5) 유휴 및 신규재원활용

① 지방정부 세계잉여금 활용

2021년에 국민기본소득제를 처음 시행할 경우(총32조 원 소요)

	2021년		2022년		2023년	
	월30만원	월40만원	하위안	상위안	월35만원	월45만원
순세계 잉여금 사용액	16조 원	16조 원	10조 원	10조 원	6조 원	6조 원

마. 자원마련방법 (5) 유휴 및 신규재원활용

② 재정증가분의 일부 활용

□ 정부 재정의 증가분에서 최소 9조 원, 최대 145조 원의 재원을 마련

- 향후 중앙정부의 재정이 일정한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전제하는 상황에서 그 증가분의 상당분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가정
- 하나는 기존 재정 증가분의 사용처의 상당분이 불요불급했다는 것이고,
- 다른 하나는 재정 증가분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기본소득 재원 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지는 국민의 뜻에 맡겨 정치적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
- 나라살림연구소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늘어난 113조 원의 정부 예산의 사용처를 파악한 결과, 예산 증가분이 큰 분야는 사회복지, 일반·지방행정, 교육 순이었다.

최근 3년 예산증가액이 큰 상위 5개분야

분야명	2017년 본예산	2020년 정부안	3년간 증가액	연평균 증가율
사회복지	119.1	168.0	48.9	12.2%
일반·지방행정	63.3	80.5	17.1	8.3%
교육	57.4	72.5	15.1	8.1%
국방	39.0	48.7	9.7	7.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23.9	7.9	14.3%

3. 누가 손해/이익을 보는가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가구유형 ① 연소득 1억원인 외벌이 4인 가구(부부와 미취학 두 자녀)

단위 : 만원

가족	연소득	기본소득	감소분	추가지출/소득감소 내용
부/모1	10000	360	815	- 소득세 비과세 감면 감소(명목세율 3%p 인하된 상태) : 약 700만 원(연소득자 9820만원인 사람 감면분이 평균 685만원)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115만 원(세율 32% 적용)
부/모2	0	360	10.8	기본소득 과세 (세율 3%)
자녀1	120	360	130.8	- 아동수당 120만 원 대체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10만8000원(세율 3%)
자녀2	120	360	130.8	- 아동수당 120만 원 대체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10만8000원(세율 3%)
계	10240	1440	1087.4	

순손익 = 1440만원(기본소득) - 1087.4만원(세금증가/복지대체) = 352.6만원

맞벌이 3인 가구의 경우



가구유형 ② 부부 합산 연봉 9000만원인 맞벌이 3인 가구(중학생 자녀)

단위 : 만원

가족	연소득	기본소득	감소분	추가지출/소득감소 내용
부/모1	6000	360	506	- 소득세 비과세 감면분 감소(명목세율 3%p 인하된 상태) : 약 430만 원(연소득 6041만원인 경우 감면분이 평균 435만 원)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76만 원(세율 21%)
부/모2	3000	360	249	- 소득세 비과세 감면분 감소(명목세율 3%p 인하된 상태) : 약 430만 원(연소득 6041만원인 경우 감면분이 평균 435만 원)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76만 원(세율 21%)
자녀1	0	360	10.8	기본소득 과세 (세율 3%)
계	9000	1080	765.8	

순손익 = 1080만원(기본소득) - 765.8만원(세금증가) = 314.2만원

노년+청장년 3인 가구의 경우



가구유형 ③ 연소득 3500만원의 쉼거루 3인 가구(노년의 부모와 성인 자녀)

단위 : 만원

가족	연소득	기본소득	감소분	추가지출/소득감소 내용
부/모1	304.5	360	315.3	- 기초연금 304만5000원 대체(소득 하위 20~70% 구간)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10만8000원(세율 3%)
부/모2	304.5	360	315.3	- 기초연금 304만5000원 대체(소득 하위 20~70% 구간)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10만8000원(세율 3%)
자녀1	3500	360	281	- 소득세 비과세 감면분 감소(명목세율 3%p 인하된 상태) : 약 238만 원(연소득 3520만 원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평균 239만원 받고 있음)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10만8000원(세율 12%)
계	4109	1080	911.6	

순손익 = 1080만원(기본소득) - 911.6만원(세금증가/복지대체) = 168.4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2인 가구



가구유형 ④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2인 가구(한부모와 5세 미만 자녀)

단위 : 만원

가족	연소득	기본소득	감소분	추가지출/소득감소 내용
부/모1	1092	360	360	•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현상유지
부/모2	420	360	360	• 생계급여 수급가구는 기본소득 지급으로 손해를 입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현상유지
계	1512	720	720	

- 수급자 가구의 소득은 2인 가구 생계급여(2021년 예상 중위소득 기반으로 추정) 월91만원, 한부모자녀 아동양육비 월20만원, 5세 미만에게 주어지는 추가양육비 월5만원, 아동수당 월10만원 등 총 1512만원임.

순손익 = 720만원(기본소득) - 720만원(복지대체) = 0원

(사각지대는 소멸하며 차상위계층은 국민기본소득의 수혜자가 됨)

청년 1인 가구



가구유형 ⑤ 연소득 5000만원의 청년 1인 가구

단위 : 만원

가족	연소득	기본소득	감소분	추가지출/소득감소 내용
청년	5000	360	401	- 소득세 비과세 감면분 감소(명목세율 3%p 인하된 상태) : 약 325만 원(연소득 4997만 원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평균 323만원 받고 있음)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76만원(세율 24%)
계	5000	360	401	

$$\text{순손익} = 360\text{만원(기본소득)} - 401\text{만원(세금증가)} = -41\text{만원}$$

청년 1인 가구 + @



가구유형 ⑤ 연소득 5000만원의 청년 1인 + 그의 가족들

그런데 이 청년에게 같이 살진 않아도
퇴직한 부모와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동생이 있다면?

가족	연소득	기본소득	감소분	추가지출/소득감소 내용
부/모1	304.5	360	315.3	- 기초연금 대체 : 월25만3750원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 10만8000원(세율 3%)
부/모2	304.5	360	315.3	- 기초연금 대체 : 월25만3750원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 10만8000원(세율 3%)
청년	5000	360	401	- 소득세 비과세 감면분 감소(명목세율 3%p 인하된 상태) : 약 325만 원(연소득 4997만 원인 경우 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평균 323만원 받고 있음) -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76만원(세율 24%)
동생	0	360	10.8	받는 기본소득에 대한 과세: 10만8000원(세율 3%)
계	5609	1440	1042.4	

순손익 = 1440만원(기본소득) - 1042.4만원(세금증가/복지대체) = 397.6만원

4. 효과와 전망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1)



지니계수 추정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데이터 기준)

구 분	모형 별 지니계수
현 행	0.3243
30만 원 (2021년 시행, 전 구간 소득세율 3%p 인하)	0.2304
40만 원 (2021년 시행, 전 구간 소득세율 2%p 인하)	0.2257
35만 원 (2023년 시행, 전 구간 소득세율 2%p 인하)	0.2271
45만 원 (2023년 시행, 전 구간 소득세율 현행 유지)	0.2210
50만 원 (2028년 시행, 전 구간 소득세율 현행 유지)	0.2195
65만 원 (2028년 시행, 전 구간 소득세율 현행 유지)	0.2150

소득불평등 완화효과 (2)



분위별 소득점유율과 소득5분위 배율

구 분	1분위 (0-20)	2분위 (20-40)	3분위 (40-60)	4분위 (60-80)	5분위 (80-100)	5분위 배율
현 행(2019년 1분기)	0.066	0.125	0.175	0.238	0.395	5.912
30만 원 안(2021년)	0.091	0.149	0.197	0.244	0.317	3.491
40만 원 안(2021년)	0.092	0.151	0.198	0.243	0.314	3.405
35만 원 안(2023년)	0.092	0.150	0.198	0.244	0.315	3.430
45만 원 안(2023년)	0.094	0.152	0.198	0.242	0.311	3.313
50만 원 안(2028년)	0.094	0.153	0.199	0.243	0.310	3.289
65만 원 안(2028년)	0.096	0.154	0.199	0.242	0.307	3.184

빈곤 감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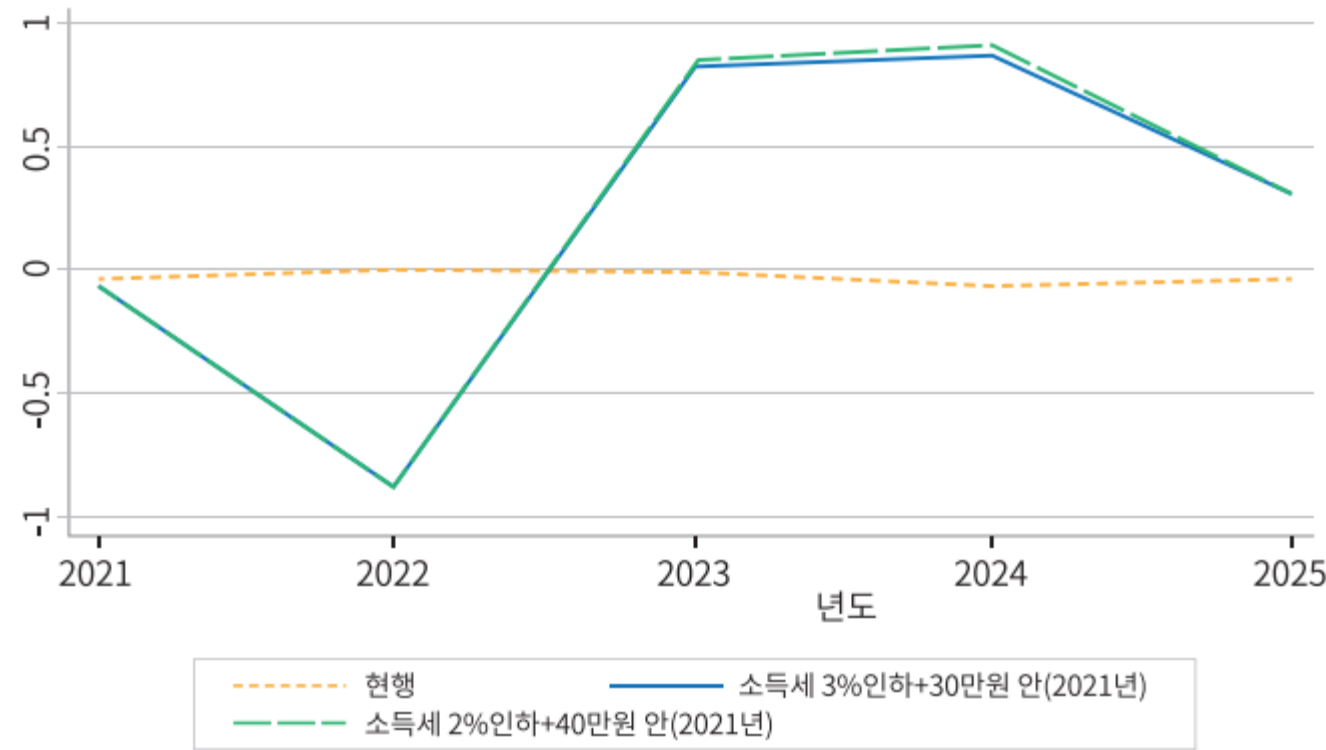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지수

구 분	상대적빈곤율	빈곤갭지수
현 행	0.153	0.0506
30만 원 (2021년 시행, 전 구간 소득세율 3%p 인하)	0.147	0.0216
40만 원 (2021년 시행, 전 구간 소득세율 2%p 인하)	0.140	0.0203
35만 원 (2023년 시행, 전 구간 소득세율 2%p 인하)	0.143	0.0203
45만 원 (2023년 시행, 전 구간 소득세율 현행 유지)	0.137	0.0186
50만 원 (2028년 시행, 전 구간 소득세율 현행 유지)	0.134	0.0187
65만 원 (2028년 시행, 전 구간 소득세율 현행 유지)	0.126	0.0183



2021년 국민기본소득 도입시 소비성향 변화 전망



국민기본소득제의 1차, 2차 기대효과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는 국민소득 선분배를 통한 사회 활력 복원

- 소상공인 자영업자, 창업가, 불안정 노동자, 자유노동자에게는 소득안전망을 제공
- 비영리 종사자, 사회적경제 종사자, 문화예술인, 독립 연구자에게는 소득보전을 제공
- 가계에는 소비여력을 제공
- 빈곤 사각지대의 획기적 완화를 실현

간접적이고 장기적으로는 자유안정성 사회로의 이행

- 자기실현적 행복을 추구하는 시민을
- 위험을 선호하며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 시민에게 보호와 안정을 제공하며 간섭을 줄이는 국가를

제안: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하자



국가기본소득위원회를 설립해 다음을 논의해야 함

❑ 재정 모델 정교화

- 이번 연구에서 국민기본소득제의 재원을 상세하게 분석했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 손봐야 하는 법률이나 통합해야 하는 다른 개별 제도들에 대한 검토는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

❑ 공론화 확대

- 기본소득제는 국민 전체에게 해당되는 제도인 만큼, 국민들의 숙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공론화는 정부가 실행하되 민간이 상당한 주도성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 정책실험 실시

- 기본소득 도입 시 일어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책실험을 실시해야 한다. 무작위 추출 방법 등으로 일부 대상자를 선정해 사전에 소규모로 시행하면서, 기대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이미 핀란드 등 몇몇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기본소득사회의 비전: 일하며 놀며 배우며



□ 가치와 보람을 찾는 일자리

- 경직되고 불안한 고용상황을 생계부담 감소로 유연화
- 교육, 사회적경제, 비영리, 문화예술 등 공익형 일자리 종사자 확대
- 비시장 영역의 일자리의 확대

□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 학령기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주입식 교육에서 함께 익히는 학습으로
- 온라인, 지방대, 마을공동체 인프라를 활용해 학습확대
- 전체 성인 역량향상으로 사회 경쟁력 확대

□ 자유로운 영리/비영리 활동

- 기존 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규제 정비
- 생계불안 없는 창업가 확대
- 소득불안 없는 사회혁신활동 확대

감사합니다

